

## 대한민국의 햇볕정책,북핵,사드와 관련 미·중에 대한 외교해법은 남북한의 3차원적 안목

### 〈 대한민국 외교해법 〉

- 햇볕정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계속해야할지에 대해 국민의 바람이 있으나 현재 국제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실전배치단계로 들어가는데 사드를 배치해야하는가?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가? THAAD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과 대륙간탄도탄 미사일을 용인하지 않고, 북한을 정밀타격(Preempt strike, Surgical strike)하는, 군사적 수단을 거론하는 현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남북관계를 3차원으로 보아야 해결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도 남한의 정책을 못하게 막을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전배치를 못하게 막지 못함으로써 남한 사드배치가 불가피했음을 인식해야하고 앞으로 악화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 〈 남북관계에 대한 해결은 3차원으로 접근해야한다 〉

#### 1. 한민족의 남북분단 상황에서 민족의 통합으로 가는 역사적 인식은 지속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이 점을 미국과 중국 등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설득하고 공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북통일이 앞으로 목전에 왔을 때 설득하려면 쉽지않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동의를 받아내고 축적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햇볕정책,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등은 남한이 감당할 수준의 손해나 부담은 감수하도록 남한 국민을 설득하고 북한 지도자도 설득해야 한다. 김대중대통령 햇볕정책에 대하여 진보와 보수가 공과를 평가할 수 있으나 편향된 안목으로 민족 통합의 역사적 인식을 가볍게 보거나 민족통합의 노력을 영구적으로 폐기해서는 안된다. 개성공단 폐쇄나 금강산관광이 중지된 것은 남북 지도자가(어느 한쪽이라도) 민족통합의 역사적 인식을 공유하지 않았거나 그것을 발전시키는 미래지향적 비전이나 안목에 반하여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보편적인 1차원의 그 동안 사업들이 국제사회 요구 조건과 충돌하였을 때 설득할 수 없었고 해결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민족통합으로 가는 역사적 인식은, 지금 막혀있더라도 언젠가 남북한이 관통되고 공유될 것이다. 이것은 꼭 오고 햇볕정책과 다양한 남북교류는 언젠가 재개되어야 한다.

#### 2. 남북한과 미·중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북한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수많은 국제협약과 UN결의에 위반이다. 남한 국민의 딜레마는 남·북 민족 통합의 역사적 인식으로 국제규범을 외면하고 북한 편을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외교적, 경제적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한계를 정해야한다. 2004.9월 개성공단 개설과 관련, 미국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과 실무협의 시에 미국 측의 질문은 “유사시 북한이 개성공단내 남한 국민과 기업 재산을 억류, 몰수, 절취했을 때 남한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고 통일부 대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실전배치한다면 우리국민은 “북한이, 동족인 남한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에 사용할 것”이란 선전을 믿고 “서울 불바다” 발언에 대하여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여도 좋은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남북 군사력에서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하는 상황에 대하여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갖는지 보다 남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하여 확실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핵이 국제사회 규범상으로 심각한 위험단계를 넘으면 1차원의 햇볕정책 등이 민족역사차원에서 아픈 일이지만 중단시킨 게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지 않음으로서 진보와 보수가 의견을 달리 하면서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김정은 지도자의 인식이 바뀌고 불장난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최우선적 관심사인, 북한체제의 존속보장에 대하여 남북정상: 미·중 정상 간에 북한핵 동결 또는 폐기와 병합의제로 논의하고 타결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해결의 길입니다. 국제규범과 충돌로 인하여 민족통합의 역사적 인식에서 햇볕정책과 남북교류사업이 유보되는 현실은, 국민의 여망에는 안타깝지만 북한이 국제평화를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언젠가 재개해야하며 남북대화를 통해 설득이 계속되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이 WTO(세계무역기구)의 호혜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조언한다.

### 3.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은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햇볕정책에서 개성공단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봉쇄하거나 준전시 상황에서 남한국민이 억류되고 남한기업 재산과 상품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남한정부의 대책 미비는 국제사회의 안목에서 보면 미진하였다. 북한이 천안함 도발, 연평도 폭격의 경우나, 북핵 같은 비대칭 무기를 실전배치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중국, 미국의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즉각적으로 원점 타격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은 동족이지만,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그것은 적대행위이며 그에 상응하는 이상으로 응전하는 것만이 현재의 휴전상태에서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북핵 실전 배치단계에 우리의 최소한 방어조치는 무엇인가? THAAD 배치의 과정은 잘못이 있더라도 사드 배치는 불가피했다. 물론 현 상태에서 중국·미국·북한과 외교적 노력으로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외교적 조치는 필요하다. 우선 중국과 협상에서, 북한이 핵을 가져도 남한은 무방비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묻고, 중국이 북한핵을 폐기시킬 능력이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남한은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하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THAAD로 방어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THAAD가 북핵에 효과적인지 여부는 사드를 배치하는 우리국민의 과제로 남는다.

중국이 북한핵 폐기를 가시화할 수 있다면 남한은 THAAD를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안 되면 MD체계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남한은 중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중국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지도자를 신뢰하므로 우린 그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고 대응책을 세우지 않았다. 북한 핵으로 인하여, 남한이 사드 구축, MD체계로 개편, 중국에는 불가피하게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을 수없는, 惡化一路로 가지 않도록 하는 길이 남한과 중국 지도자가 모색해야할 과제임을 상호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안목에서 남한의 THAAD 배치에 대하여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해결책이 전혀 아니다. 남한 탓만 하는 것은 앞으로 양국관계와 북한·미·남한·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일 뿐이다.